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6년 9월 2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

🔍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 이번 포럼은 「국가재정법」과 「양성평등기본법」등에 근거하여 도입·운영되어 온 '성인지 예산제도'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됨.

〈성인지예산제도 주요 추진 경과〉

①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인지 예산제도 근거 마련('06년)
 - * '09 회계연도 시범사업 실시, '10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09년)
- ▶ 대상 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고, 분석 내용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명시(국가재정법 개정, '10년)
-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개정, '11년)
 - * '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지방의회 제출(행정안전부, '12년)
- ▶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 구성·운영('14.6~)
-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21.2~)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52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함.

-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 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하였음.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5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전건 송치)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1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61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알림.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장관급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여 책임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정수석 주재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허브TF*, 관계부처, 국정원 등 다방면의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 왔음.
- 그 결과, 지난 8.20.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29% 감소(6,683개→4,736개)하였으나,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출몰하여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음.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2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75

2025년 공시대상회사 여성 임원 7.4% 전년 대비 0.3%p 상승

🔍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회사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 공시대상회사의 전체 임원 중 남성은 92.6%, 여성은 7.4%(자산 2조 이상 8.4%)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 임원 비율이 '24년 7.1%에서 '25년 7.4%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였으나 성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음.
- 근로자수 대비 임원 비율은 남성 임원이 2.3%, 여성 임원이 0.5%로 남성이 여성 보다 4.6배 높게 나타났음.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9. 2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84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저출생	돌봄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2026. 9. 16.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봄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 9. 21.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 9. 21.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2026. 9. 22.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지원(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2026. 9. 22.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교육장을 추가(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6. 9. 29.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안 제6조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2026. 9.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안 제11조의3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2026. 9. 11.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안 제71조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2026. 9.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여성고용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2026. 9. 14.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운영, 고용평등심의회 설치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등)
젠더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2026. 9. 15.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6. 9. 17.	아동·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안 제20조의2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8인)	2026. 9. 23.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 논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공동으로 “지역 성평등 거버넌스의 재설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9월 29일(화)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음.

🔍 이번 포럼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지역 성평등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추진체계와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참고자료

• [배포일: 2026. 9. 28.]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34311>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 국제포럼	2026.09.16	뉴스핌	성인지예산 20년, 사업 규모 26조원대로 확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고도화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6000684
	2026.09.16	뉴시스	성인지 예산' 20주년... 내년 33개 부처·27조 규모 확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6_0003792391
	2026.09.16	뉴시스	성인지 예산제도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성과지표 11.4% 개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6_0003792039
	2026.09.16	연합뉴스	성인지 예산 근거 마련 20주년... 기획처·성평등부 국제 포럼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38600002?input=1195m
	2026.09.16	이데일리	성인지예산 20년... 내년 27조원 규모로 확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41126645580776&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_syndication&utm_content=original_article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제1차 여성고용노동포럼'	2026.09.17	뉴시스	노동부, '여성고용노동포럼' 개최... 정책 아이디어 청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7_0003794614
	2026.09.17	여성신문	"성별 고용격차 해소 시 한국 1인당 GDP 8.9% 개선"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301
	2026.09.17	연합뉴스	일하는 여성 목소리 듣는다... 노동부, 여성고용노동포럼 첫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88600530?input=1195m
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2026.09.25	서울신문	"결혼 앞둔 여친이 저만 용돈 받으라네요"...부부 경제권 어떻게? [사연잇슈]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23/20260923500203?wlog_tag3=naver
[연구보고서] 가사노동시간 측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	2026.09.25	뉴스1	"음식 준비 대신 가족여행·외식"... 10가구 중 7곳 차례 안 지낸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300663
	2026.09.27	중앙일보	"꼭 말해줘야 알아?"... 설거지 한 남편, 아내가 열받은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4914
[연구보고서]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대비 사전연구	2026.09.26	세계일보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대비 사전연구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2510920?OutUrl=naver

[연구보고서]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2026.09.27	서울경제	"담배 사줄게" 접근... 온라인 파고든 미성년 성매수	https://www.sedaily.com/ article/20095210?ref=naver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	2026.09.28	뉴스핌	"지역 성평등 전담부서 강화해야"... 중앙·지방 거버넌스 재설계 논의	https://www.newspim.com/news/ view/20260928000338
	2026.09.28	뉴시스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 위상 제한적"... 조직·기관 갖춰야"	https://www.newsis.com/view/ NISX20260928_0003804838

• 연구자 인터뷰

날짜	매체명	제목	관련 연구자	기사링크
2026. 9. 11.	뉴시스	"공무원 절반이 여성인데... 경찰·소방은 여전히 10%대 그쳐"	김선아 부연구위원	https://www.newsis.com/view/ NISX20260911_0003785701
2026. 9. 11.	서울신문	공무원 절반 여성인데... "경찰·소방은 여전히 10%대"		https://www.seoul.co.kr/news/ society/2026/09/11/20260911500231?wlog_ tag3=naver